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을 중심으로

이 래 혁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의 빈곤실태와 빈곤화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빈곤화 원인의 내부적 다양성을 규명하고자 1998년에서 2005년까지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의 방법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이 근로빈곤가구의 빈곤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중 146가구(7.6%)가 장기근로빈곤한 상태였고, 636가구(32.9%)가 단기근로빈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인적자본(여성, 고연령, 저학력, 기혼무배우자), 취약한 가구형태(노인가구), 불리한 가구특성(중소도시 거주, 적은 가구원수, 18세 이하 자녀 있음, 자가 아님), 불안정한 노동시장특성(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의 긴 종사기간)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근로빈곤가구의 빈곤기간을 장기화 시키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취약한 가구유형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내부적 차이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에 단순히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에서 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고 구체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1. 문제제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빈곤의 영역에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즉, 빈곤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인데,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근로빈곤(working poor)¹⁾ 현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빈곤이라는 용어는 연구자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빈곤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과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²⁾ 실제로 199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반하여 빈곤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의 안정적인 추이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³⁾

이렇게 여러 객관적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근로빈곤층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수집단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양적 확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송호근, 2001; 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김교성 외, 2006).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증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 확충, 창업자금 융자 지원, 각종 취업프로그램 실시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탈빈곤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탈빈곤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의 실효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4대보험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
- 1) 근로빈곤은 ‘Working Poor’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빈곤상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Working Poor’를 ‘근로빈곤층’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에서 각각 다루도록 하겠다.
 - 2) 한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취업자 유무라는 ‘근로’ 기준과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빈곤’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정의한 뒤, 실태를 분석하여 2001년 12.0%, 2002년 12.5%, 2003년 13.2%로 규모가 증가 추세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진호·황덕순·금재호·이병희·박찬임, 2005: 67~70). 이 외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규모의 증가 추세를 보고하는 연구로 홍경준(2005), 김교성·최영(2006)의 연구가 있다.
 - 3) 실제로 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7.0%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1년을 이후 지속적으로 3%대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빈곤율은 1998년 8.2%, 2002년 5.2%, 2004년 6.0%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상대빈곤율 역시 1998년 10.7%, 2002년 9.7%, 2004년 11.7%로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김재진·박능후, 2005).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률이 낮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의 기능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⁴⁾ 또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지원제도 역시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자활지원사업은 대상의 제약, 근로를 유인하기 어려운 급여구조,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효과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경기조절용 공공근로 방식의 임시적 일자리가 주류를 이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한 창업자금 융자방식의 대안은 저소득층 자활에 한계를 드러냈고, 기타 각종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일 뿐이다.⁵⁾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대안들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정책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빈곤층의 명확한 특징과 빈곤화의 원인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은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의 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기존에 선행되어 온 근로빈곤층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화되고 구체화된 접근 방법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동향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근로빈곤층의 빈곤 원인 규명에 있어 좀 더 적절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다룬 기존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은 첫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규모나 특징을 밝히는 차원에 머무르는 횡단분석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⁶⁾ 이는 빈곤역동(poverty dynamics)을

4) 일반층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연금 63%, 산재보험 75%, 고용보험 44%인 것에 반하여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연금 23%(차상위층 29%, 빈곤층 21%), 산재보험 42%(차상위층 50%, 빈곤층 37%), 고용보험 18%(차상위층 25%, 빈곤층 13%)로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적용률 역시 크게 낮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효과가 매우 취약하여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41.6%에 이르는 것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기준 4.5%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극빈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근로빈곤층 보호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지원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각종 급여의 수급률은 전국민의 4% 수준으로 선진국이 10% 내외의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7~9).

5)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수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비수급 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계층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2004년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6만명 가운데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층은 2만명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개념 및 정책목표, 수혜대상, 정책수단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한 창업자금 융자방식은 담보와 보증이 필요하여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각종 취업촉진 프로그램은 취업알선기관 방문 비율이 6%,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술습득 비율이 2.8%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효과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10~13).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간의 패널데이터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약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빈곤이행과 빈곤기간(poverty duration)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현실적 한계와 맞물려 빈곤기간 측정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료가 조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8개년도의 정보가 구축되면서 빈곤기간을 다루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cross-section analysis)으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총량적인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정태적 연구(static analysis)에서 벗어나 장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기간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빈곤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빈곤기간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빈곤역동을 다룬 연구들은 빈곤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층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규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을 다룬 대부분의 동태적 연구(dynamics analysis)들이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영향요인 규명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기간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빈곤기간에 따라 내부적 차이를 분석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속기간에 따라 장기간 빈곤한 경우, 단기간 빈곤한 경우를 구분한 뒤, 각각의 경우 빈곤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동일한 근로빈곤층을 빈곤기간에 따라 내부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장기간 빈곤한 경우와 단기간 빈곤한 경우는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예방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한된 자원을 가진 사회는 특히 장기빈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적절한 측정은 빈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대상을 정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중요하다(Rodgers and Rodgers, 1993: 25~26). 또한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의 마련을 위해서 근로빈곤층을 기존의 연구보다 세밀히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빈곤기간 구분을 통한 분석이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분석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노령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경제상황의 악화가 맞물려 근로빈곤, 여성빈곤, 한부모가구 빈곤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유형을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더 분

6)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화의 원인이나 근로빈곤층 내부의 다양성을 조명한 분석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금재호, 2003),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근로빈곤층의 규모나 이들의 특징을 밝히는 차원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절되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증대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노동시장특성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제기와 기존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속기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제1차년도)부터 2005년(제8차년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 빈곤화 원인의 내부적 차이와 다양성을 분석하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낼 것이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빈곤화 원인의 내부적 다양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탈빈곤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에 따른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의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근로빈곤층의 효과적인 빈곤 감소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개인특성·가구특성·가구유형·노동시장특성에 따라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개인특성·가구특성·가구유형·노동시장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연구과정의 설계에 바탕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빈곤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7)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1998년에서 2002년까지를 분석한 연구(신은주, 2004)가 가장 장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수급대상으로 포함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⁸⁾ 이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경향은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연구(노대명·최승아, 2004; 홍경준, 2005),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송호근, 2001; 구인회, 2002; 강병구, 2003; 금재호, 2003; 노대명 외, 2004; 김영란, 2005), 결정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이태진, 2003; 신은주, 2004; 최옥금, 2004; 김교성 외, 2006)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연구에 활용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정의나 범위 설정이 다르게 나타난다.⁹⁾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데 있어 두 가지 중심축이 되는 것은 ‘근로’와 ‘빈곤’으로 근로능력 유무나 취업여부를 한축으로 두고 절대빈곤선 또는 상대빈곤선을 다른 한축으로 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빈곤의 기준(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의 40%, 50%, 60%, 평균소득의 1/3)을 중심으로 연구들을 분류하여 각각의 근로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⁰⁾

먼저,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들의 경우(구인회, 2002; 최현수, 2003; 신은주, 2004), 근로의 기준을 취업상태의 가구주로 정의할 경우 4.63%(최현수, 2003),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정의할 경우 13.9%(신은주, 2004) 정도의 근로빈곤층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상대빈곤선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강병구, 2003; 노대명, 2003; 이태진, 2003; 최옥금, 2004; 김영란, 2005),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송호근, 2001)나 중위소득의 40%(홍경준, 2005) 또는 중위소득의 50%(금재호, 2003; 김교성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탈빈곤제도의 실행이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9)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연구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또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금재호, 2003),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근로빈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모든 선행연구가 ‘근로’와 ‘빈곤’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의 기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빈곤의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류하는 것은 중요성의 반영이기 보다는 단순히 설명에 있어서의 편의와 명료함을 위해서임을 밝혀둔다.

외, 2006)를 사용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있다.

근로빈곤층을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지면서 근로능력자 및 희망자가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할 경우 12.2%(장병구, 2003)의 규모를 보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지면서 근로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범주로 확대하면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21.4%(노대명, 200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빈곤 기준을 가지면서 만 15세~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한 경우, 11.7%(이태진, 2003)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상대적 빈곤선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사용한 경우, 근로빈곤층을 근로 기준이 취업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정의하면 14%(금재호, 2003) 정도의 규모를 보이며,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취업상태인 개인이라고 정의하면 10.3%(김교성 외, 200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위소득의 40%나 평균소득을 상대 빈곤의 기준으로 사용한 경우, 근로빈곤층을 평균가구소득 1/3 이하의 소득을 가지면서 완전 또는 불완전취업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정의하여 7%(송호근, 2001)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면서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 지난 6개월 이내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여 10.7%(홍경준, 2005) 정도의 규모를 파악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근로빈곤의 개념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근로빈곤층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여부와 근로능력자 여부라는 각각의 조합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분석대상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한 선택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또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4: 2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근로의 기준은 크게 근로능력 여부, 취업상태 여부, 근로소득 유무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했을 경우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근로빈곤층을 과대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최옥금, 2004: 8). 또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로 분석대상을 정의할 경우, 대다수의 빈곤층이 속해 있을 미숙련 노동시장의 경쟁심화와 취업불안정의 증대로 인해 빈곤층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으며, 그 경계 또한 애매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해 근로빈곤층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신은주, 2004: 10~11).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최옥금, 2004; 홍경준, 2005). 즉,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포괄범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근

11) 이렇게 정의할 경우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로빈곤층에 대한 명확히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않는 현 시점에서 어떤 개념이 더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¹²⁾ 근로빈곤을 개념 정의하는 두 가지 기준인 ‘빈곤’과 ‘근로’는 모두 논쟁이 되는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절대빈곤선에 비해서 상대빈곤선은 빈곤층의 규모를 많아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빈곤선 주위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상대빈곤선이다. 이런 식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의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현재 일하면서 빈곤한 상태인 사람을 선별하고자 하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취업한 상태이면서 빈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좀 더 유연하게 대상의 범위를 정하려면 근로능력이나 근로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개념정의에 대한 유연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작화한 뒤 다른 개념정의들에 의한 결과들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연구대상을 설명하면서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구대상 기간 내내 근로빈곤한 가구를 선별해야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나 취업여부가 아닌 가구 총소득 가운데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선정하고자 한다. 어떤 가구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은 가구주나 가구원 중 취업자(임금노동자)가 존재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을 통해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2.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일정한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빈곤화의 원인을 규명한다. 이렇게 빈곤지속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오랜 기간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여타의 빈곤층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더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장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그 개인, 한 세대에서 빈곤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빈곤하게 되는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Auletta, 1982; Wilson, 1987). 또한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전체 빈곤층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Bane and Ellwood, 1986: 1). 그러므로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은 특성과 원인이 다르며, 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달라야 있다(최옥금, 2004: 9).

12)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외국문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연소득이 너무 낮아 4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모든 근로자’(Gorham and Harrison, 1990; Schiller, 1998),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Levitan, Gallo, and Shpiro, 1993)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다. 예를 들면, 장기근로빈곤한 대상들에게는 소득지원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야하고, 단기근로빈곤한 대상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러한 방법론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빈곤지속기간 측정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빈곤기간 관련 방법론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정된 시간 틀 속에서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도표화(tabulation)하는 방법, 둘째, 빈곤기간과 탈출확률에 기초한 기간분석방법(duration analysis), 셋째, 항상소득 개념을 사용하는 항상소득접근법(permanent income approach)이 있다. 이 중 항상소득접근법은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며, 나머지 방법은 일시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한다.¹³⁾

첫 번째 방법은 도표화를 통해서 장기(지속)빈곤과 단기(반복)빈곤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빈곤층에 속했던 인구의 비중 및 특성을 추적하는 것이다(Rodgers et al., 1993; 금재호·김승택, 2001). 예를 들면, n의 기간 중 x년 동안 빈곤한 사람들을 장기빈곤층이라고 정의한다면, x년 이상 빈곤한 장기빈곤층과 x년 이하의 기간 동안 빈곤한 단기빈곤층의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다($0 \leq x \leq n$).

이 방법은 간단한 도표화를 통해 분석기간 중에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금재호 외, 2001).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데, 도표화 연구는 장기빈곤을 설명하는 연도수가 임의적으로 선택된다는 비판을 받는다(Rodger et al., 1993: 28). 또한 절단(censoring)¹⁴⁾ 문제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Bane et al., 1986: 4). 즉, 관찰된 일정 기간의 시작지점이나 종료지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실제로 관찰이 시작된 시점 전에 이미 빈곤하였을 수 있고, 관찰이 종료된 시점 후에 빈곤기간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기간분석은 도표화에서 발생하는 절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Bane et al., 1986). 이 방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장기빈곤으로 간주한다.¹⁵⁾ 기간분석 방법은 절단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별로 빈곤탈출확률을 추정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 주기(completed spell)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ne et al., 1986: 5).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이 기간분석 방법은 절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점 역

13) 일시소득은 한해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사용된다. 반면, 항상소득은 평균화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의 시점간 이동을 반영하여 평균소득으로 빈곤의 지속성을 판단할 경우에 사용된다.

14) 절단에는 좌측절단과 우측절단이 있다. 좌측절단은 조사 자료의 시작 시점보다 이전 시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측절단은 조사 자료의 종료 시점보다 이후의 시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송경일·안재역, 2003).

15) 기간분석의 방법은 Bane et al.(1986), 홍경준(2004), 신은주(2004), 최옥금(2004), 구인회(2005)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시 절단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나타난다. 위험확률(hazard rate)모델¹⁶⁾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우측절단의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좌측 절단된 사례를 제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게 되고, 빈곤이행에 있어 그것을 포함할 때 보다 많은 편의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좌측 절단되는 것이 관찰되었다(Iceland, 1997). 또한 기간분석 방법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해 소득을 빈곤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빈곤 탈출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을 빈곤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루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김대일, 2004: 60; 이혜신, 2005: 7).

세번째 방법인 항상소득접근법은 연구대상기간의 평균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항상빈곤한 집단을 구분해내는 방법이다. 즉, 항상소득접근법은 한해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 항상소득접근법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소득수준을 모형화하고 오차항에 항상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 빈곤에 속해있는 기간과 빈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Duncan and Rodgers, 1991). 두번째는 항상소득의 구체적인 값을 이용해 빈곤 지수를 대입하여 빈곤의 지속성을 측정한다(Rodgers et al., 1993; Kuchler and Goebel, 2003; Otto and Goebel, 2003).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은 경제상황의 악화, 노동에 따른 대체효과 등의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이혜신, 2005: 3).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 평균화된 항상소득과 같이 지속성을 가지는 기준에 의해 빈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상소득은 생활의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Rainwater, 1981: 5).

항상소득접근법을 사용하여 빈곤집단을 선별하게 되면, 한해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기간을 측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고, 소득의 시점간 이전(inter temporal transfer)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몇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먼저 절단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연구대상 연도들의 평균화소득을 사용해도 연구시작 시점 이전과 종료시점 이후에 빈곤한 대상들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화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점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한 채, 항상빈곤선을 마치 절대빈곤선처럼 사용하여 물가의 변화와 같은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빈곤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도표화, 기간분석, 항상소득접근법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장단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방법이 유사하게 빈곤기간 절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제각기 다른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 지속기간에 따라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할 것이므로 도표화 방법을 사용하여 빈곤지속기간을 측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면 빈곤탈출 시점을 확인하고 그

16)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서는 생존확률(survival rate)과 위험확률(hazard rate)을 계산한다. 생존확률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을 확률을 말하며, 위험확률은 사망할 확률을 말한다(송경일 외, 2003: 31 ~ 32). 빈곤과 관련해서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생존확률은 계속 빈곤할 확률을 의미하며, 위험확률은 빈곤을 벗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원인을 규명할 수는 있지만 빈곤지속기간을 구분하여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항상소득접근법을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없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이 제각기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도표화 방법의 경우에 관찰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공되는 정보는 더욱 정확해진다. 그리고 반복적인 빈곤은 기간분석 방법보다는 도표화 방법에 의해 더 잘 포착된다(Rodgers et al., 1993: 29).

따라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8개년도 동안 매해 근로빈곤에 빠지는 가구들을 추출한 뒤, 4년에서 5년 사이를 기준으로 단기빈곤한 경우와 장기빈곤한 경우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다른 두 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명확하게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유용함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조사 시작시점이 1998년이어서 이론상 제기되는 절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로빈곤층도 빈곤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문 경우와 빈곤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경우 등 내부적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따라 빈곤화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집단의 빈곤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부합하는 연구가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지적해야 할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서 다루게 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빈곤기간 측정방법과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빈곤기간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결정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이혜신, 2006: 11).

둘째,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범위를 빈곤역동을 다룬 연구의 범위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빈곤역동에 대한 연구들이 빈곤기간의 영향요인 규명보다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지속기간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장기간의 패널자료가 요구되는데, 최근까지 이러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조사년도만으로도 분석을 수행하다보니 빈곤진입과 탈출의 원인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빈곤탈출은 빈곤지속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므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빈곤지속기간 결정요인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구인회, 2005: 353).

셋째, 근로빈곤층의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특성과 가구유형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고(김연명·김종건, 2003: 359), 이는 근로빈곤층 증가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에 기술하겠지만 외환위기 이

후 여성빈곤의 심화,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 가족 해체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일반가구와 구별되는 특정한 형태의 가구들이 특히 더 근로빈곤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빈곤역동을 다룬 논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고려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힌 연구는 크게 세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을 다룬 연구(신은주, 2004)이고, 두번째는 일반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을 다룬 연구(이원익, 1999; 최정균, 2000; 구인회, 2005; 이혜신, 2005; 김아래미, 2006)이며, 마지막은 일반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집입과 탈출을 다룬 연구(황덕순, 2001; 이병화·정재호,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4)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빈곤지속기간, 빈곤진입여부 또는 빈곤탈출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 먼저 연령, 교육수준, 성별, 결혼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은 대부분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기본적인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거주지역, 가구규모, 가구 내 취업자수, 부양노인수, 부양아동수, 입주형태, 가구원수 등의 가구특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 고용산업, 고용직종 등의 노동시장특성을 영향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으며, 이전소득의 규모, 가구지출 규모, 근로능력, 가구유형 등을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역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향요인은 개인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으로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¹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 가지 범주를 모두 고려한 뒤,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개인특성 요인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중요한 빈곤 결정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생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빈곤의 위험에 빠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많은 실증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빈곤탈출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황덕순, 2001; 김교성 외, 2004)도 있고,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연구(구인회, 2005)도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17) 선행연구에서는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빈곤역동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빈곤역동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가 소득을 기준으로 조작화되기 때문에 독립변수군으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관성을 묵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가구총소득을 구성할 때, 이전소득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립변수로 이전소득 변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이전소득은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은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별의 차이가 빈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 혹은 가구원의 연령이 빈곤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의 설계방법에 따라서 연령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원익, 1999; 황덕순, 2001; 구인회, 2004; 이혜신, 2005).

다음으로 교육수준도 빈곤지속기간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교육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기준이 되는 인적자본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교육수준이 빈곤탈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원익, 1999;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장기빈곤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도 역시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장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ne et al., 1986; Rodgers et al., 1993).

가구주의 혼인상태 역시 중요한 개인특성 변수로 지적된다(이원익, 1999; 최정균, 2000; 황덕순, 2001; 김교성 외, 2004; 이혜신, 2005). 혼인상태의 변화를 빈곤의 중요한 변수로 다룬 실증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로의 변화가 빈곤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집단이 빈곤 진입 집단 중 11.0%였고, 이 중 아동이 있는 여성가구주가 59.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ane et al., 1986).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 빈곤가구의 30.0% 정도를 차지하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한 가구의 경우 여성가장 가구가 40.4%로 나타나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외, 2001).

이와 같은 실증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이라는 네가지 변수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의 내부적 차이는 이러한 인적자본 요인보다는 다른 특성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 변수들을 항상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나. 가구특성 요인

가구의 특성 역시 빈곤의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변수들은 거주지역, 입주형태, 18세 미만 자녀 유무, 양육아동 유무, 부양노인 유무, 가구원수, 취업자수 등이다.

가구내에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많거나 부양하고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빈곤해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러한 변수를 다룬 실증연구에서 15세에서 18세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할 확률이 15.4%씩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김학주, 2004), 이것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⁸⁾ 이와는 대

18) 이와 유사한 결과로 양육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더 빈곤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구인

조적으로 부양노인 유무의 경우 이 변수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룬 소수의 연구들(최정균, 2000; 신은주, 2004)이 있는데,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부양노인 유무가 빈곤가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빈곤가구가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여건인지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가구원수의 경우, 빈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가구규모와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구는 구성원 수가 많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빈곤가구의 가구구성원 수가 평균 가구구성원 수보다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병현, 1997).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구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수가 증가하여 빈곤탈피의 잠재적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구규모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가구원수를 변수로 사용한 여러 연구들(황덕순, 2001; 이병희 외, 2002; 김교성 외, 2004; 신은주, 2004; 홍경준, 2004; 김아래미, 2006)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구의 규모라는 변수가 분명히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는 하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빈곤탈피의 중요한 변수로 가구구성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수를 제시하기도 한다(Rank, 1985; Bane et al., 1986).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의 수가 많은 것이 그만큼 가구의 빈곤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가구의 거주지역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이원익, 1999)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지속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의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사용하여 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신은주, 2004: 16), 거주하는 지역의 차이가 빈곤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빈곤지속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특성 중 주택소유 여부나 입주형태는 빈곤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진다. 주거와 빈곤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주거빈곤(shelter poverty)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소유냐는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질적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다(하성규, 2002: 3~4). 그러나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변수 측정상의 문제 때문에 주택의 소유형태나 점유형태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가에 비해서 전세나 월세, 또는 기타 유형의 주택형태를 가진 경우에 빈곤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4).¹⁹⁾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 중에서 또 한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회, 2005)도 제시되고 있어서 아동양육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 또는 양육비 지출의 증가가 가구의 빈곤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19) 또한 빈곤이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이병희 외, 2002).

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가구유형 변수가 있다. 국내에서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빈곤지속기간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가구유형을 구분하거나 가구유형을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다(신은주, 2004; 홍경준, 2004; 이혜신, 2005; 김아래미, 2006). 앞서 개인특성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구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할 경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빈곤기간 분석에서 가구유형 변수를 포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기간을 고려함에 있어서 장기빈곤에 빠지기 쉬운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것은 한부모가구나 노인가구와 같은 가구유형 변수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가구의 유형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구, 부자가구, 모자가구, 단독가구, 노인가구, 소년소녀가구로 구분하여 빈곤지속기간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와 독신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박병헌, 1997).²⁰⁾ 이상에서 살펴본 실증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장기빈곤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을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고, 비노인가구를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일반가구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 그리고 한부모가구와 단독가구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 노동시장특성 요인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근로빈곤층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등을 겪음으로 인하여 빈곤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노동시장분절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분절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분절된 노동시장별로 임금결정과 고용안정상태가 다르며, 각각의 분절된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우 제한된 이동이 있다고 지적한다(Kimenyi, 1994). 노동시장의 분절 이유는 흔히 두 가지의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그 하나는 내부노동시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경제이론(dual economy theory)이다. 두 이론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²¹⁾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주변부문)의 노동자들은

20) 이외에도 일반가구와 모자가구를 구분하여 자활프로그램에서 탈출하는 요인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서 낮은 탈출률을 보여주고 있으며(강철희, 1997), 가구유형에 따른 반복빈곤을 다룬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와 편부모가구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장기빈곤의 경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장기빈곤 경향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홍경준, 2004), 비노인 여성가구 또한 장기빈곤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인회, 2005).

21) 내부노동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으면,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이직이 기업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 높은 임금, 좋은 작업환경, 진급의 기회 등의 유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경제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집중된 독점부문(핵심부문)과 작은 경쟁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나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진급할 기회도 적은 직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성 외, 2004).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가지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외부노동시장(주변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분절로 인하여 빈곤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정규직)를 유지할수록 빈곤 탈피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비정규직과 실업)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의 빈곤진입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으며(김교성 외, 2004),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상당수 보고되었다(황덕순, 2001; 이병희 외, 2002; 홍경준, 2004).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통해서 빈곤한 집단의 노동시장특성이 빈곤이행 및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고용상태가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차노동시장(독점부문)의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차노동시장(주변부문)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민간경제부분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이들을 위해 보다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지속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노동시장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 도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과정을 설계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소개하고,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될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조작화하고, 분석에 기반이 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1. 연구자료와 연구대상

가. 분석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도(1차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여 현재 2005년도(8차년도)까지 자료가 구축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

주변부문(경쟁부문)으로 노동시장이 분절되며, 독점부문에 속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태성·손병돈, 2004: 59~60).

하였다. 현재 노동패널은 9차년도 자료가 조사 중에 있고 8차년도 자료까지 완성된 상태로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상당히 긴 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은 도시가계조사²²⁾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1997년 이후 경제위기와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빈곤 양상과 원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노동패널은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의 비근로자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구인회, 2002: 89). 따라서 노동패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노동패널은 각종 정보가 가구자료, 개인자료, 신규자료에 연도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수들을 취합(matched merg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가구·개인 공통 아이디(ID)를 기준으로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취합한 뒤, 1차년도(1998)에서 8차년도(2005)까지 공통적인 가구번호(hid)를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8개년도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나서 8년 내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선별하여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셋(data set)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32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연구대상의 설정

① 빈곤선의 설정

본 연구의 대상은 근로빈곤층 중 장기빈곤한 집단과 단기빈곤한 집단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의 개념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어떤 빈곤의 개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선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빈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빈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생존의 수준(subsistence level)이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아니므로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김태성 외, 2004: 22~23).

22) 빈곤을 다룬 많은 기존연구에서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도시가계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가계부 기장방식을 통해 분기별로 가구소득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비교적 신뢰성 높은 소득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농어촌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도시 지역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1인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 이외의 가구는 제외하고 있으며 취업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유경준, 2000: 13).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하는 절대적 빈곤은 공적 제도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빈곤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소득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상대적 빈곤을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빈곤선 주위를 활발히 오가고 있어서 빈곤을 벗어난 경우라도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을 머물고 있다는 점(구인회, 2001)과 근로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송호근, 2001; 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신은주, 2004; 최옥금, 2004; 홍경준, 2005)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할 쟁점이 있는데, 그것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있지만 빈곤선 이하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김태성 외, 2004: 24). 반면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최옥금, 2004: 3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근로빈곤층은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위소득을 빈곤선을 사용함에 있어서 50%를 기준으로 사용하자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보고의 문제를 고려하고, 많은 선행연구가 50%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²³⁾

② 연구대상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을 구분하여 빈곤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조작화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야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을 선정하고 나서 다시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을 구분해야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이면서, 가구총소득을 이루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이렇게 근로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장기근로빈곤층과 단기근로빈곤층이므로 연구 대상 기간 내내 빈곤하면서 근로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로의 기준을 취업 여부로 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빈곤층이 취업과 미취업을 빈번하게 오

23) 평균소득이든 중위소득이든 그것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작위적이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 없다(김태성 외, 2004: 24). 따라서 연구자가 분석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사용했다(금재호, 2003; 김교성 외, 2006).

가고 있어서 대상자에서 쉽게 탈락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매해 근로빈곤한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선별한 뒤, 가구균등화지수²⁴⁾를 적용하여 가구원수가 통제된 가구총소득의 중위값에 50%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근로빈곤 가구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중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빈곤한 경우에 1값을 부여한 뒤 8개 년도를 합산하여 0년에서 8년까지 빈곤했수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선별한 상태에서 빈곤했수가 0년으로 8년 동안 한번도 빈곤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빈곤했수가 1년에서 4년 사이인 경우를 단기근로빈곤으로, 빈곤했수가 5년에서 8년 사이인 경우를 장기근로빈곤으로 구분하였다.²⁵⁾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분석에서 장기근로빈곤가구는 146가구, 단기근로빈곤가구는 636가구, 비빈곤가구는 1,150가구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으로 연구대상기간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기간으로 1998년에서 2005년까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에 새롭게 부각된 신빈곤의 논의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98년을 연구의 시작 시기로 잡는 것이 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 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패널자료이므로 조사의 시작시점에서 현재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게 되면, 빈곤기간 측정 시 이론상의 절단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으로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으로 구분된 명목변수이다. 앞서 연구대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빈곤했수가 5년에서 8년 사이면서 연구기간 내내 근로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장기근로빈곤으로, 빈곤했수가 1년에서 4년 사이면서 계속 근로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단기근로빈곤으로 조작화한다. 또한 8년 동안 한번도 빈곤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로소득을 가지는 경우를 비빈곤 집단으로 분류한다.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 장기근로빈곤은 0, 단기근로빈곤은 1, 비빈곤은 2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독립변수군은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 독립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time-dependent variables)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구분하여 조작화한다. 즉, 대부분의 변수는 2005

24) 가구총소득을 구할 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서 가구총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구원수를 통제해두지 않으면, 가구간의 소득을 비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에서 가구원수를 통제하기 위해 총소득을 가구원수에 루트값을 취한 값(가구균등화 지수)으로 나누어주었다.

25) 도표화 방법에서 빈곤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의성이 도표화 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년의 기간을 정확히 이분하여 빈곤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였다.

년의 정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지만 시간의 영향을 받는 변수들은 8년간의 평균값을 사용하거나 8년간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연속변수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변수속성과 측정수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항목	변수명		변수속성	측정수준
독립 변수	가구특성	거주지역		중소도시 = (1) 대도시 = (2)	명목척도
		평균 가구원수 ^{A)}		8개년도 가구원수의 평균값	비율척도
		18세 이하 자녀 유무		없다 = (1) 있다 = (2)	명목척도
		입주형태		전세/월세/기타 = (1) 자가 = (2)	명목척도
	가구유형			노인가구 = (1) 한부모가구 = (2) 단독가구 = (3) 부부가구 = (4) 일반가구 = (5)	명목척도
	노동시장 특성 ^{B)}	종사상 지위	상용직	8년 중 상용직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임시직	8년 중 임시직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일용직	8년 중 일용직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고용 산업	1차산업	8년 중 1차산업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행정/기타서비스업	8년 중 행정/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고용 직종		단순노무직	8년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전문/관리/사무직	8년 중 전문/관리/사무직에 종사한 기간(헛수)	비율척도		
통제 변수	개인특성	성별		남성 = (1) 여성 = (2)	명목척도
		평균 연령 ^{A)}		8개년도 연령의 평균값	비율척도
		혼인상태		기혼무배우자 = (1) 기혼유배우자 = (2) 미혼 = (3)	명목척도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 (1) 대학교 재학 이상 = (2)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 (3)	명목척도
종속 변수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		장기근로빈곤 = (0) 단기근로빈곤 = (1) 비빈곤 = (2)	명목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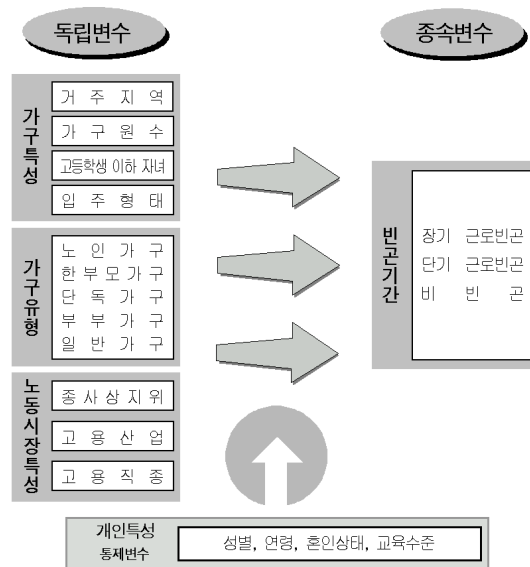
주. A) 가구원수와 연령 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8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B) 노동시장특성 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한해를 기준으로 고용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종속변수와 시간의 불일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고용형태에 종사한 기간을 측정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특성의 각 하위변수는 그 고용형태에 종사한 헛수를 의미한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가.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상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개의 변수군(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내부적 차이와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빈곤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상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에 따라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 연구가설 1 개인특성은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가구특성은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가구유형은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4 노동시장특성은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방법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 X^2 -test), 평균 비교분석(Independent t-test, ANOVA)의 기술통계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변수들 간의 피상적인 관계와 회귀분석의 기초 가정을 확인한 뒤,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²⁶⁾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의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가지 범주 이상으로 구성된 형태일 경우, 이 중 한 범주를 기준으로 정하여 다른 범주를 기준 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은 아래의 [그림 3-2]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²⁷⁾ 이러한 모든 분석과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p>[회귀식 1] 각 독립변수들이 $\log e \frac{P0}{P2}$ (P0 : 장기근로빈곤, P2 : 비빈곤)에 미치는 영향</p> $\log_e (P0/P2) = a_1 + b_1\text{성별} + b_2\text{연령} + b_3\text{교육수준} + b_4\text{거주지역} + b_5\text{가구원수} + b_6\text{입주형태} + b_7\text{가구유형} + b_8\text{상용직} + b_9\text{임시직} + b_{10}\text{일용직} + b_{11}\text{1차산업} + b_{12}\text{행정/기타서비스업} + b_{13}\text{단순노무직} + b_{14}\text{전문/관리/사무직} + \epsilon$
<p>[회귀식 2] 각 독립변수들이 $\log e \frac{P1}{P2}$ (P1 : 단기근로빈곤, P2 : 비빈곤)에 미치는 영향</p> $\log_e (P1/P2) = a_2 + b_{15}\text{성별} + b_{16}\text{연령} + b_{17}\text{교육수준} + b_{18}\text{거주지역} + b_{19}\text{가구원수} + b_{20}\text{입주형태} + b_{21}\text{가구유형} + b_{22}\text{상용직} + b_{23}\text{임시직} + b_{24}\text{일용직} + b_{25}\text{1차산업} + b_{26}\text{행정/기타서비스업} + b_{27}\text{단순노무직} + b_{28}\text{전문/관리/사무직} + \epsilon$
<p>[회귀식 3] 각 독립변수들이 $\log e \frac{P1}{P0}$ (P1 : 단기근로빈곤, P0 : 장기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p> $\log_e (P1/P0) = (a_2 - a_1) + (b_{15} - b_1)\text{성별} + (b_{16} - b_2)\text{연령} + (b_{17} - b_3)\text{교육수준} + (b_{18} - b_4)\text{거주지역} + (b_{19} - b_5)\text{가구원수} + (b_{20} - b_6)\text{입주형태} + (b_{21} - b_7)\text{가구유형} + (b_{22} - b_8)\text{상용직} + (b_{23} - b_9)\text{임시직} + (b_{24} - b_{10})\text{일용직} + (b_{25} - b_{11})\text{1차산업} + (b_{26} - b_{12})\text{행정/기타서비스업} + (b_{27} - b_{13})\text{단순노무직} + (b_{28} - b_{14})\text{전문/관리/사무직} + \epsilon$

[그림 3-2] 분석에 사용된 회귀식

26)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서열이 명확치 않은 명목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간 확률에 기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확대 적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Allison, 1999: 111 ~ 112).

27) 근로빈곤층의 전체 특성이 투입된 경우의 회귀식이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먼저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중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 비빈곤 집단별로 개인특성·가구특성·가구유형·노동시장특성이 어떠한 규모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서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피상적 관계를 살펴본 뒤, 각각의 영향요인이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빈곤선의 설정과 연구대상의 규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먼저 연도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선별하여 각각의 중위소득을 구한 뒤, 이 값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가구소득은 가구원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연도별 소득의 변화추이를 [표 4-1]에서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1년까지는 평균소득의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평균값이 몇몇 극단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1년 평균소득 1,156.14만원, 2003년 1,500.78만원 2005년 1,700.14만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50%로 설정한 상대빈곤선은 2001년 500.00만원, 2003년 635.09만원, 2005년 717.01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소득, 빈곤선 ^{A)}

(단위 : 만원)			
조사년도	평균소득	중위소득	빈곤선 ^{B)}
1차년도(1998)	1,364.18(1,390.26)	900.00 (848.53)	450.00(424.27)
2차년도(1999)	1,619.83(1,876.96)	1,018.23 (1,073.31)	509.12(536.66)
3차년도(2000)	1,545.01(1,645.19)	1,020.00 (979.80)	510.00(489.90)
4차년도(2001)	1,156.14(1,049.04)	1,000.00 (900.00)	500.00(450.00)
5차년도(2002)	1,372.02(1,245.75)	1,200.00 (1,090.18)	600.00(545.09)
6차년도(2003)	1,500.78(1,368.56)	1,270.17 (1,200.00)	635.09(600.00)
7차년도(2004)	1,632.74(1,466.83)	1,385.64 (1,259.52)	692.82(629.76)
8차년도(2005)	1,700.14(1,517.69)	1,434.01 (1,272.79)	717.01(636.40)

주. A) 근로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음. 가로 안의 값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소득, 중위소득, 빈곤선임.

B) 빈곤선 :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함.

다음으로 연구대상 8개년도의 빈곤가구 및 근로빈곤가구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4-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빈곤가구의 규모는 2001년 878가구(21.4%), 2003년 974가구(21.9%), 2005년 1,157가구(24.1%)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근로빈곤가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75가구(15.9%)로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2001년 572가구(15.8%), 2003년 657가구(16.6%), 2005년 747가구(18.0%)로 소폭의 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규모면에서 감소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빈곤가구 대비 근로빈곤가구의 규모 역시 매우 경미한 변동은 있으나 일정한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소폭이지만 증가추세에 있다는 분석결과는 앞서 문제제기에서 지적한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소폭의 증가추세지만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근로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많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빈곤 관련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빈곤기간을 연구함으로써,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빈곤문제의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빈곤의 빈곤화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4-2] 연도별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의 규모

(단위 : 가구, %)

조사년도	전체가구	빈곤가구	근로가구 ^{A)}	근로빈곤가구 1 ^{B)}	근로빈곤가구 2 ^{C)}
1차년도(1998)	5,000	1,185 (23.7)	4,250	675(15.9)	675(57.0)
2차년도(1999)	4,359	702 (16.1)	3,869	584(15.1)	584(83.2)
3차년도(2000)	4,149	800 (19.3)	3,676	548(14.9)	548(68.5)
4차년도(2001)	4,096	878 (21.4)	3,613	572(15.8)	572(65.1)
5차년도(2002)	4,206	906 (21.5)	3,726	585(15.7)	585(64.6)
6차년도(2003)	4,449	974 (21.9)	3,950	657(16.6)	657(67.5)
7차년도(2004)	4,666	1,102 (23.6)	4,056	673(16.6)	673(61.1)
8차년도(2005)	4,803	1,157 (24.1)	4,157	747(18.0)	747(64.6)

주. A) 근로가구는 전체가구 중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B) 근로빈곤가구 1 : 전체가구 대비 근로빈곤가구

C) 근로빈곤가구 2 : 빈곤가구 대비 근로빈곤가구

또한 앞서 선정한 각 년도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 규모와 연구대상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가구 중 16가구(0.8%)가 8년 내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년 중 7년 동안 빈곤한 가구는 34가구(1.8%)였고, 6년도 34가구(1.8%), 5년 62가구(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빈곤기간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비빈곤, 단기근로빈곤, 장기근로빈곤을 구분하였다. 먼저, 8년 동안 근로소득을 계속 가지면서 한번도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의 경우는 1,150가구(59.5%)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을 계속 가지면서 8년 중 1년에서 4년 빈곤을 경험한 단기근로빈곤은 636가구(32.9%)였으며, 근로소득을 계속 가지면서 5년에서 8년 빈곤을 경험한 장기근로빈곤은 146가구(7.6%)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당수의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 규모와 연구대상 규모

(단위 : 가구, %)

빈곤기간	빈곤가구 ^{A)}	근로빈곤가구 ^{B)}	단기/장기근로빈곤 ^{C)}
비빈곤	3,343 (53.9)	1,150 (59.5)	1,150 (59.5)
1년	1,133 (18.3)	320 (16.6)	636 (32.9)
2년	564 (9.1)	135 (7.0)	
3년	350 (5.7)	111 (5.8)	
4년	254 (4.1)	70 (3.6)	
5년	184 (3.0)	62 (3.2)	146 (7.6)
6년	178 (2.9)	34 (1.8)	
7년	155 (2.5)	34 (1.8)	
8년	38 (0.6)	16 (0.8)	
합계	6,199 (100.0)	1,932 (100.0)	1,932 (100.0)

주. A) 빈곤가구 : 전체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8년간 빈곤을 경험했던 횟수로 빈곤기간을 구분함.

B) 근로빈곤가구 : 전체 빈곤가구 중 8년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는 가구를 선별한 뒤 빈곤기간을 구분함.

C) 단기/장기근로빈곤 : 8년 내내 근로소득을 가지면서 횟수로 5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장기근로빈곤으로, 1년에서 4년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단기근로빈곤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구분함.

나. 빈곤기간에 따른 영향요인의 실태

연구문제 1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에 따른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빈곤기간에 따른 개인특성의 규모와 특징

아래의 [표 4-4]는 전체 집단을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개인특성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단기근로빈곤의 경우 가구주 성별 중 ‘남자’가 547명(87.8%), ‘여자’가 76명(12.2%)으로 나타났고, 장기근로빈곤에서는 ‘남자’가 88명(61.1%), ‘여자’가 56명(38.9%)으로 분석되어 장기근로빈곤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가구주가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의 경우 단기근로빈곤 중 ‘기혼무배우자’가 97명(15.6%), ‘기혼유배우자’가 514명(82.5%)으로 나타났고, 장기근로빈곤에서는 ‘기혼무배우자’가 61명(42.4%), ‘기혼유배우자’가 74명(54.9%)으로 분석되어 장기근로빈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혼무배우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인 경우는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 모두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장기근로빈곤 중 113명(78.5%)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가 26명(18.1%), ‘대학교 재학 이상’이 5명(3.5%)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로빈곤 중 ‘중졸 이하’ 315명(50.6%), ‘고등학교’ 220명(35.3%), ‘대학교 재학 이상’ 88명(14.1%)인 것에 비해서 낮은 교육수준이긴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연령의 경우 장기근로빈곤집단이 평균 55.72세로 단기근로빈곤의 평균 49.32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특성의 빈곤기간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표 4-4] 빈곤기간에 따른 개인특성

구분(명목변수)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	합계	통계치
단위 (명, 세, %)						
성별	남자	88 (61.1)	547 (87.8)	1,067 (94.1)	1,702 (89.5)	$\chi^2=151.25^{***}$ df=2
	여자	56 (38.9)	76 (12.2)	67 (5.9)	199 (10.5)	
혼인상태	기혼무배우자	61 (42.4)	97 (15.6)	92 (8.1)	250 (13.2)	$\chi^2=137.27^{***}$ df=4
	기혼유배우자	74 (54.9)	514 (82.5)	1,016 (89.6)	1,609 (84.6)	
	미혼	4 (2.8)	12 (1.9)	26 (2.3)	42 (2.2)	
교육수준	중졸이하	113 (78.5)	315 (50.6)	272 (24.0)	700 (36.8)	$\chi^2=258.12^{***}$ df=4
	고등학교	26 (18.1)	220 (35.3)	495 (43.7)	741 (39.0)	
	대재이상	5 (3.5)	88 (14.1)	367 (32.4)	460 (24.2)	
구분(연속변수)		장기근로빈곤(a)	단기근로빈곤(b)	비빈곤(c)	통계치	
연령	평균	55.72	49.32	45.94	F=71.27***	a≠b
	표준편차	12.77	10.47	9.52		a≠c
	최소값	15.00	24.57	22.63		b≠c
	최대값	80.50	82.50	80.50		
	사례수	146	636	1,147		

주. *** : p<.001

②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특성의 규모와 특징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표 4-5]에서 살펴보면, 우선 거주지역의 경우 장기근로빈곤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87가구(60.4%)이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57가구(39.6%)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단기근로빈곤은 ‘중소도시’ 299가구(48.0%), ‘대도시’ 324가구(52.0%)로 분석되어 단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특별히 거주지역에 큰 치우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유무의 경우, 장기근로빈곤 집단은 ‘있다’가 36가구(24.7%), ‘없다’가 110가구(75.3%)이며, 단기근로빈곤 집단은 ‘있다’가 262가구(41.2%), ‘없다’가 374가구(58.8%)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18세 이하의 자녀가 적다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입주형태에서는 장기근로빈곤의 경우 ‘자가 아님’이 57가구(39.0%)이며, ‘자가’인 경우가

89가구(61.0%)로 나타났다. 단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자가 아님’ 210가구(33.0%), ‘자가’ 426가구(67.0%)로 분석되어 절대적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두 집단이 비슷한 경향으로 자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에서는 장기근로빈곤이 평균 3.08명, 단기근로빈곤이 평균 3.87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비빈곤의 경우에는 평균 3.90명으로 평균가구원수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이 빈곤탈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빈곤기간별 가구특성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특성

구분(명목변수)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	합계	통계치
거주지역	중소도시	87 (60.4)	299 (48.0)	506 (44.6)	892 (46.9)	$\chi^2=13.23^{**}$ df=2
	대도시	57 (39.6)	324 (52.0)	628 (55.4)	1,009 (53.1)	
18세 이하 자녀	없다	110 (75.3)	374 (58.8)	527 (46.0)	1,011 (52.4)	$\chi^2=60.43^{***}$ df=2
	있다	36 (24.7)	262 (41.2)	620 (54.0)	918 (47.6)	
입주형태	자가아님	57 (39.0)	210 (33.0)	306 (26.7)	573 (29.7)	$\chi^2=14.47^{***}$ df=2
	자가	89 (61.0)	426 (67.0)	841 (73.3)	1,356 (70.3)	
구분(연속변수)		장기근로빈곤(a)	단기근로빈곤(b)	비빈곤(c)	통계치	
가구원수	평균	3.08	3.87	3.90	F=40.20***	a≠b a≠c
	표준편차	1.35	1.11	.96		
	최소값	1.00	1.00	1.00		
	최대값	8.00	9.50	7.25		
	사례수	146	636	1,147		

주. *** : p<.001, ** : p<.01

③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유형의 규모와 특징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표 4-6]에서와 같이 빈곤기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장기근로빈곤의 경우 ‘노인가구’가 48가구(33.3%)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 37가구(25.7%)와 ‘부부가구’ 26가구(18.1%), ‘일반가구’ 24가구(1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단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부부가구’가 251가구(4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가구’가 230가구(36.9%)로 높게 나타났다. 비빈곤의 경우에는 ‘일반가구’가 570가구(50.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합계의 빈도를 살펴보면, ‘일반가구’가 824가구(4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가구’가 700가구(36.9%)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다른 집단들이 부부가구나 일반가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장기근로빈곤 집단에 노인가구가 많다는 것은 빈곤기간과 고령화 현상 간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제언 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빈곤기간별 가구유형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빈곤기간에 따른 가구유형

구분		장기근로빈곤	단기근로빈곤	비빈곤	합계	통계치
가구 유형	노인가구	48 (33.3)	47 (7.5)	35 (3.1)	130 (6.8)	$\chi^2=284.82^{***}$ df=8
	한부모가구	9 (6.3)	17 (2.7)	26 (2.3)	52 (2.7)	
	단독가구	37 (25.7)	78 (12.5)	80 (7.1)	195 (10.3)	
	부부가구	26 (18.1)	251 (40.3)	423 (37.3)	700 (36.9)	
	일반가구	24 (16.7)	230 (36.9)	570 (50.3)	824 (43.4)	

주. *** : p<.001

④ 빈곤기간에 따른 노동시장특성의 규모와 특징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특성은 종사상 지위, 고용산업, 고용직종의 세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다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가구주가 해당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한 햇수를 나타낸다. 먼저 [표 4-7]을 보면,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에 종사한 햇수는 장기근로빈곤 평균 .77년, 단기근로빈곤 평균 2.30년, 비빈곤 평균 4.37년으로 나타나 장기근로빈곤이 상용직 종사 햇수가 가장 짧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시직의 경우 비빈곤이 평균 .19년으로 가장 짧았고,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은 평균 .36년과 평균 .29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장기근로빈곤이 평균 1.49년, 단기근로빈곤이 평균 .83년, 비빈곤 평균 .35년으로 장기근로빈곤이 가장 오래 일용직에 종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빈곤기간에 따른 종사상 지위

구분	장기근로빈곤(a)	단기근로빈곤(b)	비빈곤(c)	통계치		
사례수	146	636	1,147			
상용직	평균(표준편차)	.77(1.96)	2.30(2.93)	4.37(3.51)	F=137.06***	a≠b, a≠c, b≠c
	최소/최대값	.00/8.00	.00/8.00	.00/8.00		
임시직	평균(표준편차)	.29(.99)	.36(1.04)	.19(.85)	F=6.49**	b≠c
	최소/최대값	.00/7.00	.00/8.00	.00/8.00		
일용직	평균(표준편차)	1.49(2.56)	.83(1.93)	.35(1.35)	F=38.63***	a≠b, a≠c, b≠c
	최소/최대값	.00/8.00	.00/8.00	.00/8.00		

주. *** : p<.001, ** : p<.01

이와 같이 종사상 지위별로 연구대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사기간은 노동시장 분절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낮은 종사상 지위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면, 빈곤한 상태를 지속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장기근로빈곤 집단과 단기근로빈곤 집단이 상이한 종사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집단 모두 낮은 종사상 지위를 가지지만 단기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기근로빈곤 집단은 일용직 종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빈곤기간에 따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빈곤기간에 따른 고용산업의 종사횟수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차산업 종사기간을 보면, 장기근로빈곤 평균 2.03년, 단기근로빈곤 평균 .88년, 비빈곤 평균 .25년으로 장기근로빈곤 집단이 가장 오랫동안 1차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행정/기타서비스업을 보면, 종사기간은 장기근로빈곤 평균 1.12년, 단기근로빈곤 평균 1.09년, 비빈곤 평균 1.79년으로 비빈곤의 경우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표면적인 해석이지만 단기근로빈곤 집단과 장기근로빈곤 집단은 고용산업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근로빈곤의 경우 1차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더 길어서 고용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곤기간별 고용산업 종사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빈곤기간에 따른 고용산업

구분	장기근로빈곤(a)	단기근로빈곤(b)	비빈곤(c)	통계치
사례수	146	636	1,147	
1차산업 평균(표준편차)	2.03(2.78)	.88(2.00)	.25(1.13)	F=91.85*** a≠b, a≠c, b≠c
최소/최대값	.00/7.00	.00/7.00	.00/7.00	
행정/기타 서비스업 평균(표준편차)	1.12(2.28)	1.09(2.25)	1.79(3.04)	F=14.96*** a≠c, b≠c
최소/최대값	.00/8.00	.00/8.00	.00/8.00	

주. *** : p<.001, ** : p<.01

마지막으로 빈곤기간에 따른 고용직종 종사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4-9]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기간은 장기근로빈곤 평균 1.08년, 단기근로빈곤 평균 .76년, 비빈곤 평균 .39년으로 장기근로빈곤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관리/사무직의 종사기간은 비빈곤이 평균 1.34년으로 가장 길었고, 단기근로빈곤 평균 .40년, 장기근로빈곤 평균 .14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직종의 종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고용산업과 마찬가지로 빈곤기간에 따라 직종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고용직종 중 단순노무직이 가장 불안정한 고용상태인데, 노동시장분절이론을 통해 예측한 것처럼 이 경우에 빈곤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장 안정적인 고용상태일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에 투입한 행정/기타서비스업의 경우 비빈곤의 종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노동시장 분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곤기간별 고용직종 종사기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빈곤기간에 따른 고용직종

구분	장기근로빈곤(a)	단기근로빈곤(b)	비빈곤(c)	통계치	
사례수	146	636	1,147		
단순노무직	평균(표준편차)	1.08(1.99)	.76(1.66)	.39(1.33)	F=21.93*** a≠b, a≠c, b≠c
	최소/최대값	.00/7.00	.00/7.00	.00/7.00	
전문/관리/사무직	평균(표준편차)	.14(.75)	.40(1.00)	1.34(1.96)	F=86.02*** a≠c b≠c
	최소/최대값	.00/7.00	.00/7.00	.00/7.00	

주. *** : p<.001

이상에서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특성별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인적자본(여성, 고연령, 저학력, 기혼무배우자), 취약한 가구형태(노인가구), 불리한 가구 특성(중소도시 거주, 적은 가구원수, 18세 이하 자녀 있음, 자가 아님), 불안정한 노동시장특성(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의 긴 종사기간)을 지니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문제 2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피상적인 관계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변수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진단해본다. 아울러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변수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10]과 같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수치상 종속변수와 일차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계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와의 단순한 방향성과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인과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분석의 결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성,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 순으로 정리한다.

먼저 종속변수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개인특성 중 부부가구와 교육 2, 가구특성 중 거주지역, 가구원수, 자녀유무, 입주형태, 가구유형 중 유형2, 노동시장특성 중 상용

직, 행정/기타서비스업, 전문/관리/사무직으로 나타났고,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혼인1, 교육1, 가구유형 중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단독가구, 노동시장특성 중 임시직, 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0]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

구분	종속 변수	개인특성						가구특성				
		성별	연령	혼인1	혼인2	교육1	교육2	거주지역	가구원수	자녀유무	입주형태	
개인 특성	성별	-.25***										
	연령	-.26***	.16***									
	혼인1	-.24***	.75***	.26***								
	혼인2	.22***	-.74***	-.12***	-.87***							
	교육1	-.35***	.27***	.47***	.29***	-.21***						
	교육2	.24***	-.11***	-.28***	-.16***	.15***	-.42***					
가구 특성	거주지역	.08***	-.01	-.03	-.01	.01	-.06*	.03				
	가구원수	.15***	-.27***	-.12***	-.27***	.32***	-.11***	.03	.02			
	자녀유무	.18***	-.18***	-.59***	-.18***	.20***	-.35***	.27***	-.02	.28***		
	입주형태	.09***	-.09***	.25***	-.09***	.15***	.05*	.01	-.07**	.14***	-.15***	
가구 유형	노인가구	-.26***	.12***	.56***	.17***	-.13***	.24***	-.14***	-.08***	-.20***	-.17***	.08***
	한부모가구	-.05*	.25***	-.02	.42***	-.37***	.04	-.03	-.02	.02***	.17*	-.05
	단독가구	-.16***	.60***	.06**	.66***	-.75***	.19***	-.11***	.01	-.36***	-.32***	-.13***
	부부가구	.06*	-.25***	.35***	-.29***	.34***	.15***	-.15***	.06*	.06*	-.72***	.22***
종사상 지위	상용직	.35***	-.14***	-.41***	-.19***	.15***	-.33***	.32***	.05*	.05*	.27***	.001
	임시직	-.07***	.08	.03**	.07***	-.08***	.10***	-.08	.03	-.07**	-.08***	-.04
	일용직	-.20***	.02	.04	.10***	-.09***	.16***	-.16***	.01	-.05*	-.06**	-.13***
고용 산업	1차산업	-.30***	.07**	.35***	.07**	-.04	.30***	-.17***	-.25***	-.10***	-.19***	.17***
	서비스업	.11***	-.03	-.09***	-.06**	.05*	-.13***	.26***	-.01	-.01	.02	.54
고용 직종	단순노무직	-.15***	.05*	.12***	.06**	-.05*	.20***	-.14***	.06*	-.07**	-.10***	-.06*
	전문관리사무	.28***	-.09***	-.27***	-.15***	.10***	-.36***	.48	-.02	.03	.19***	.04

주. *** : p<.001, ** : p<.01, * : p<.05

- 1)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변수의 형태가 연속변수이거나 이분형 명목변수여야 한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변수들은 모두 더미(dummy)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기준이고 혼인1=기혼무배우자, 혼인2=기혼유배우자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기준이고 교육1=중졸 이하, 교육2=대재 이상이다.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기준이고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각각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기준범주는 성별=여성, 거주지역=대도시, 18세 이하 자녀 유무=있다, 입주형태=자가이다.
- 2) 가구유형과 노동시장 특성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분석에서 필요치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은 혼인상태가 미혼에 비해 기혼유배우자인 경우, 학력이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재학인 경우,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가구유형이 일반가구이기 보다는 부부가구인 경우 빈곤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용직, 행정/기타서비스업, 전문/관리/사무직 종사기간이 길수록 비빈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무배우자인 경우, 학력이 고등학교에 비해 중졸 이하인 경우, 가구유형이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단독가구인 경우 장기빈곤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특성에서는 임시직, 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장기빈곤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표 4-10]에 음영으로 표시한 것처럼 혼인1, 혼인2와 성별의 상관계수가 .75, -.74, 혼인1과 혼인2의 상관계수가 -.87, 단독가구와 혼인2의 상관계수가 -.75, 부부가구와 자녀유무의 상관계수가 -.72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혼인1과 혼인2는 회귀분석 시에 하나의 변수에 각각의 속성으로 투입되므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세 경우는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변수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석 시에 성별을 투입할 경우 혼인상태 변수를 제외하였고, 가구유형변수를 투입할 경우 혼인상태와 자녀유무 변수를 함께 투입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이 가지는 낮은 인적자본, 취약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열악한 가구형태 등이 장기빈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비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부담이 빈곤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빈곤층의 전체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앞선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들이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변수의 수치가 보여주는 관계의 정도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유의미한 상대적 영향력을 지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여 서로를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 중 어떠한 것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체 특성으로 구성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인 혼인상태와 18세 이하 자녀 유무 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원수, 입주형태, 가구유형, 종사상 지위, 고용산업, 고용직종 변수를 투입하였다. 전체 변수가 투입된 분석모형의 우도비에 유의도값은 1.00으로 나타나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모형은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비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의 비교(두번째 칼럼)를 살펴보면, 가구유형을 제외하고 개인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특성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고등학

교인 가구에 비해 중졸 이하인 가구의 경우 단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특성에서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가구가 단기근로빈곤에 속할 승산이 1.22배 높게 나타나 주거비지출이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특성에서는 1차산업(1.19배), 단순노무직(1.14배)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비빈곤에 비해서 단기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근로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킴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첫번째 칼럼에서 장기근로빈곤과 비빈곤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인 경우 장기근로빈곤할 승산이 1.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중졸 이하인 경우 2.61배, 대학 재학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인 경우 2.20배 장기근로빈곤할 승산이 높아 교육수준이라는 변수는 근로빈곤의 지속기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특성에서는 입주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 장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비 지출이 빈곤기간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인 경우에 3.60배 장기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취약한 가구형태의 경우 근로빈곤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특성에서는 일용직(1.17배)과 1차산업(1.36배), 단순노무직(1.27배)의 종사기간이 길수록 비빈곤에 비해서 장기근로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분절된 노동시장이 근로빈곤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칼럼에서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을 비교한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이 여성인 경우 장기근로빈곤할 승산이 1.55배 높아서 여성가구주인 경우 빈곤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장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1.80배 높아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수준이 근로빈곤의 지속기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1.28배 장기근로빈곤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이 많다는 것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소득원이 많아진다고 보는 측면에서 탈빈곤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에 속하는 경우 단기근로빈곤에 비해 장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3.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시장특성에서는 일용직 종사기간이 길수록 1.11배, 1차산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1.15배 장기근로빈곤에 속할 승산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의 장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특성 중 성별과 교육수준,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 가구유형 중 노인가구, 노동시장특성 중 일용직, 1차산업, 종사기간임을 확인하였다. 즉, 남성에 비해서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인적자본을 소유하게 되어 이것이 빈곤의 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은 가구원수가 적어서 이것이 곧 소득원이 적다는 것과 연결되어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근로빈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1] 전체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장기근로빈곤 vs 비빈곤			단기근로빈곤 vs 비빈곤			단기근로빈곤 vs 장기근로빈곤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상수	.26(1.0)	.07		-.24(.51)	.21		-.50(.99)	.25	
성별(여성)									
남성	-.63(.18)	13.03 ***	.53	-.20(.13)	2.27	.82	.44(.16)	7.12 **	1.55
연령									
연령	-.02(.02)	2.00	.98	-.001(.01)	.03	1.00	.02(.02)	1.81	1.02
교육수준(고등학교)									
중졸 이하	.96(.23)	17.35 ***	2.61	.37(.09)	15.46 ***	1.45	-.59(.23)	6.55 *	.55
대학 재학 이상	-.79(.35)	4.91 *	.45	-.21(.11)	3.67	.81	.58(.36)	2.59	1.79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13(.12)	1.23	1.14	.02(.06)	.14	1.02	-.11(.11)	.88	.90
가구원수									
가구원수	-.19(.10)	3.42	.83	.06(.06)	1.03	1.06	.25(.10)	6.30 *	1.28
입주형태(자가)									
전세/월세/기타	.39(.13)	9.34 **	1.48	.20(.06)	9.53 **	1.22	-.19(.13)	2.38	.83
가구유형(일반가구)									
노인가구	1.28(.37)	11.65 ***	3.60	.11(.26)	.19	1.12	-1.17(.35)	10.97 ***	.31
한부모가구	.04(.41)	.01	1.04	-.20(.29)	.50	.82	-.24(.39)	.37	.79
단독가구	-.14(.28)	.27	.87	.12(.19)	.41	1.13	.27(.26)	1.04	1.31
부부가구	-.76(.24)	9.83 **	.47	-.05(.13)	.14	.95	.71(.24)	8.96 **	2.03
상용직									
상용직	-.28(.06)	22.36 ***	.76	-.10(.02)	24.51 ***	.90	.18(.06)	9.09 **	1.20
임시직									
임시직	-.07(.11)	.44	.93	.08(.06)	2.05	1.08	.15(.10)	2.21	1.16
일용직									
일용직	.16(.05)	8.58 **	1.17	.05(.03)	2.59	1.05	-.10(.05)	4.01 *	.90
1차산업									
1차산업	.31(.06)	30.64 ***	1.36	.17(.04)	20.71 ***	1.19	-.14(.05)	7.15 **	.87
행정/기타서비스업									
행정/기타서비스업	.05(.05)	.73	1.05	-.02(.02)	1.01	.98	-.07(.05)	1.70	.93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직	.24(.07)	10.85 **	1.27	.13(.04)	11.73 ***	1.14	-.10(.07)	2.22	.90
전문/관리/사무직									
전문/관리/사무직	-.08(.17)	.23 **	.92	-.20(.05)	14.05 ***	.82	-.12(.17)	.49	.89
Model Fit	$\chi^2 = 2641.00$, Likelihood Ratio P-value = 1.00, N = 1,901								

주. *** : p<.001, ** : p<.01, * : p<.05, ()는 해당 변수의 기준범주임.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동일한 근로빈곤층도 내부적 차이를 조명하면 빈곤화의 원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측정하고,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을 선정하여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별로 각 특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해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각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실태를 파악한다.

먼저, 위와 같은 첫번째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특성별 규모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5년~8년) 근로빈곤한 가구는 146가구(7.6%)였고, 단기간(1년~4년) 근로빈곤한 가구는 636가구(32.9%), 비빈곤한 가구는 1,150가구(59.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당수의 근로빈곤 가구가 빈곤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금재호, 2006)와 일치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이 양적으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지속 기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구의 개인특성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기혼무배우자가 더 많았고, 가구특성에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가구유형에서 빈곤 지속기간이 길수록 노인가구가 많았으며, 노동시장특성에서는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할수록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종사기간이 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상용직, 행정/기타서비스업, 전문/관리/사무직과 같은 안정된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반면, 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집단들이 단기간 경험하는 집단과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속기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열악한 인적자본, 불리한 가구특성, 취약한 가구형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 2]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두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성별로 설정된 연구가설에 따라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이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을 검증해 본 결과, 성별과 교육수준 변수가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낮은 인적자본이 빈곤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금재호·김승택, 2001; 구인회, 2002; 구인회, 2004; 신은주, 2004; 홍경준, 2004)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인적자원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이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여 가구원수와 입주형태 변수가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즉,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근로빈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장기근로빈곤할 위험이 커지는 것은 주거비로 인한 가구 지출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이 빈곤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일 경우 장기근로빈곤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서 장기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부부가구가 양성소득자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자녀양육비 지출이 없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유형이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연구(신은주, 2004)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빈곤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점과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가구유형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이 외환 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심화,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 가족 해체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구유형의 다양화에 의해서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관한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취약집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특성은 빈곤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사상 지위, 고용산업, 고용직종 별로 안정적인 고용상태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두가지 하위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장기근로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단기근로빈곤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기근로빈곤과 단기근로빈곤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특징이 도출되지 않는

았는데, 이것은 고용산업과 고용직종을 두가지 하위변수로 단순화시켜 투입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근로빈곤층 중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을 구분하여 각각의 빈곤화 원인이 어떠한 영향요인에서 기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문제 2를 분석한 결과,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중을 두었던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특성요인에서 교육수준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명확한 빈곤기간의 영향요인이기는 하지만 전체특성이 투입된 분석모형을 고려해보면, 단기근로빈곤과 장기근로빈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영향요인은 성별, 가구원수와 입주형태,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을 빈곤기간에 따라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으로 구분하여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각각의 경우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부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함의와 정책 제언

근로빈곤층을 빈곤 지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빈곤화의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동일한 근로빈곤층도 내부적 차이에 따라서 특성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들을 정리하고,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좀 더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가. 연구의 함의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장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에 따라 연구대상 기간을 구분하고 각각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있어서 내부적인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단순한 대처에서 빈곤 상태를 지속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첫번째 함의라 하겠다.

또한 빈곤기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상세히 고찰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도표화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즉, 8개 년도의 연구대상기간 동안 매해 빈곤집단을 구분하여 측정된 종속변수와 마지막 년도에 측정된 독립변수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의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오류를 보정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 함의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경우 빈곤을 장기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이 중

요함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개인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 등의 변수들이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임은 기존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을 구분하여 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가구원수나 입주형태, 특정한 형태의 가구유형,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같은 특성들이 근로빈곤의 장기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근로빈곤의 빈곤기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의 주거비·교육비 지출, 취약한 가구형태,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 정책 제언

본 연구를 시작하는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여타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해결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근로빈곤층을 위한 현재의 정책들은 자활지원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 융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고용창출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의 일정 부분을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적 접근의 탓으로 돌리고자 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근로빈곤층을 빈곤 지속기간으로 구분하여 내부적 차이를 고려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고용창출 중심의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정책들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정책 제언에 앞서 미리 짚어둘 사항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논의하는 정책대안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수준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보다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의 탐색이나 제도설계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제언은 근로빈곤층을 위한 향후 정책들이 고용창출과 소득보장을 동반해야 하며, 근로빈곤층의 내부적 차이에 의한 다양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단기근로빈곤층은 고용창출에 더해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상태를 지속화시켜서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근로빈곤층은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세정책을 실시하여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하여 조세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는 빈곤의 탈출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에서 세금지출 전후 소득으로 세제 지출이

있는 경우를 선별해본 결과, 단기근로빈곤에서 636가구 중 243가구(38.2%), 장기근로빈곤에서 146가구 중 17가구(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규모의 근로빈곤층이 조세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상당한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에서 노인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장기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아도 이러한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여겨진다. 근로빈곤층을 빈곤기간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세정책을 구상해보면, 단기근로빈곤의 경우 현재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주요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조세 혜택과 근로유인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조세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고용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유인과 연계시키기보다는 여성과 아동,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감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확대에 주력해야한다. 이것은 근로빈곤층이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기존의 자활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업자금 융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에 더해서 근로빈곤층의 내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근로빈곤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근로빈곤의 경우, 기존에 유지해오던 정책들을 보완하는 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선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간이 길거나,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근로빈곤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동일하게 위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 및 여성 취업 증가에 따라 향후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과 장기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확충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빈곤층 중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형태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곧 낮은 인적자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즉,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돕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이탈을 야기하여 오히려 빈곤을 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의 장기근로빈곤 가구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144가구 중 단 1가구(0.7%)뿐이었고, 직업훈련은 144가구 중 4가구(2.8%)만 경험이 있었으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는 144가구 중 7가구(4.9%)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근로빈곤 가구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623가구 중 3가구(0.5%),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가구는 623가구 중 26가구(4.2%),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는 623가구 중 29가구(4.7%)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기간과 상관없이 근로빈곤층의 근로능력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인 과제로 정하여 실행하되, 장기적 사회투자의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다시 이탈하지 않도록 근로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직업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하여야만 일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게 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시범사업에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최고 2배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지원하여 자활 지원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에서 단기근로빈곤의 경우 636가구 중 442가구(69.5%), 장기근로빈곤의 경우 146가구 중 58가구(39.7%)가 저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에 사용하도록 하면, 빈곤 탈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와 같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려할 점은 장기근로빈곤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형성 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크레딧(credit)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인을 위한 4대보험과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은 어느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점 중요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어느 정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에서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아본 장기근로빈곤 가구는 146가구 중 24가구(16.4%), 단기근로빈곤 가구는 636가구 중 76가구(12.0%)였고, 기타정부보조금에 의한 이전액이 있는 경우는 장기근로빈곤 146가구 중 60가구(41.1%), 단기근로빈곤 636가구 중 125가구(19.7%)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장기근로빈곤 146가구 중 10가구(6.9%), 단기근로빈곤 636가구 중 3가구(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근로빈곤층이 사회보험에 의한 수혜,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타 정부보조금의 혜택 등 모든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적제도에 의해서 지원하려면, 단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근로빈곤 가구들은 장기근로빈곤에 비해서 더 많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임금의 수준은 낮지만 사회보험 안으로 포괄하기에 더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입조건이나 기여에 대한 조건의 완화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근로빈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빈곤과 노인빈곤이라는 특징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과 기타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원방안이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통해 자활하는 과정의 부수적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앞서 살펴본 연구의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함에 있어서 기준설정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2장의 빈곤기간 관련 방법론의 소개에서 도표화 방법이 가지는 단점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간 동안 각 연도별로 빈곤여부를 파악하여 빈곤 지속기간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는 유용함을 취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표화 방법으로 빈곤기간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빈곤기간 구분은 시간의 흐름 속에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제도의 도입 등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시점부터 8년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1년~4년(4년), 5년~8년(4년)으로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을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빈곤기간의 선택에서 있어서 연구대상 기간을 4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와 4분위, 또는 각 분위별로 빈곤기간을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시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변수의 일부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구기간 중 매해 근로빈곤가구를 선별하여 이들 중 1년에서 8년까지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를 구분해낸 뒤, 장기빈곤(5년~8년)과 단기빈곤(1년~4년)으로 조작화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한 정보가 반영된 형태이다. 따라서 2005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독립변수들과 시간의 차이에 의한 정보의 불일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가구원수, 종사상 지위, 고용상태, 고용직종 등의 변수들은 평균 수치를 사용하거나 종사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연도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셋째,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공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공적이전소득, 기타 정부보조금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적 제도의 영향력과 함의를 밝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총소득 구성 시 공적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또한 노동패널 설문조사 자체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을 분석할 경우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여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면, 근로빈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탈빈곤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빈곤화의 원인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2003. “근로빈곤계층의 직업능력에 따른 탈빈곤 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철희. 1997.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명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31: 87~118. 한국사회복지학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한국사회복지학회.
- _____.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재호. 2003. “일과 빈곤”. 『제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Ⅱ』.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김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교성·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대일. 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김연명·김종건. 2003. “비정규 노동자 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 재생산 실태”. 정이환·이병훈·정건화·김연명.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재진·박능후. 2005.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논문. 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성·손병돈. 2004.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학주. 2004. “양부모가계 대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빈곤실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2003. “근로빈곤계층과 자활지원정책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 송경일·안재역. 2003. 『생존분석』. SPSS 아카데미.
- 송호근. 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한국사회학회.
- 신은주. 2004.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준. 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화·정재호. 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pp. 129~150.
- 이원익. 1999. “빈곤지속기간과 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태진. 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신. 2005. “한국의 빈곤지속성에 관한 연구: 향상빈곤과 비향상빈곤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화·박찬임. 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옥금. 2004.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정균. 2000. “사회보장이전의 빈곤제거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규모와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현수. 2003. “경제위기 이후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 연구”. 『보건사회연구』 22(1): 37~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성규. 2002. “도시 주거빈곤의 실태와 정책: 주거빈곤의 순환누적과정 및 정책적 대응방안”. 『도시연구』 8. 한국도시연구소.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과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한국사회복지학회.
- 황덕순.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pp. 31~59. 한국노동연구원.

Allison, Paul D.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Auletta, Ken. 1982. "*The Underclass*". Random House.

Bane, M. J. and Ellwood D. T.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 1~23.

Duncan, G. J. and Rodgers, W. 1991. "Has Children's Poverty Become More Persist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38~550.

- Gorham, Lucy. and Harrison, Bennett. 1990. "Working Below the Poverty Line". Washinton, DC: Aspen Institute, *Working Paper*.
- Iceland, J. 1997.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and Issues of Left-Censoring". Population Study Center,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 Kimenyi, Mwangi S. 1994. *Economics of Poverty, Discrimination, and Public Policy*. South-Western College Publication.
- Kuchler, B. and Goebel, J. 2003. "Incidence and Intensity of Smoothed Income Poverty in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4): 357 ~ 369..
- Levitan, Sar A., Gallo, Frank., and Shpiro, Issac. 1993. *Working but Po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tto, B. and Goebel, J. 2003. "Incidence and Intensity of Permanent Income Poverty in European Countries".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DIW Berlin.
- Rainwater, Lee. 1981. "Persistent and Transitory Poverty: A New Look". *Working Paper* No. 70. Joint Center for Urban Studies of Me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ilogy and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IT, Harvard.
- Rank, Mark R. 1985. "Exiting From Welfare: A Life-Table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59: 358 ~ 376.
- Rodgers, J. R. and Rodgers, J. L. 1993. "Chronic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1): 25 ~ 54.
- Schiller, Bradley R. 1998.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Ninth Edition. Prentice Hall.
- Wilson, William J. 1983. *The Tr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